

충청광역경제권,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김 용 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최근 2010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공동위원장인 3개 시·도지사가 직접 참석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함께 2010년도 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확정된 10건의 사업계획에는 도시형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계인 '광역 U-life Care 서비스사업', 'New IT 부품' 및 '담형·열처리 기술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전략산업 응용 패키지 산업', '의료기기 R&D 첨단화 사업', '저탄소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광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대표적인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사업으로써 시·도별 유사한 사업의 경쟁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9월 발족된 위원회는 사무국의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산업지원', '지역발전', '과학기술 및 인재양성' 그리고 '문화관광·환경' 등 4대 핵심 분야의 전문가와 상공인이 참여하는 자문단은 물론 '유관기관협의회' 등의 발 빠른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며 전국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충청광역경제권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최근 출범한 광역경제권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1998년 '대청호선언'을 시작으로 충청권 3개 시·도간 협력과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고, 특히 2006년 민선자치 4기 출범 이후에는 '대전·충남북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광역적 협력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그동안 광역경제권 육성시책은 중앙정부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데 치중해 왔다. 이러한 시책이 정부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접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광역경제권을 하나의 경쟁력 있는 경제단위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 광역경제권 육성시책은 지역발전추진체계의 혼란과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가 광역경제권 육성시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광역추진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광역경제추진체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축했던 지역종합발전추진체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추진체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육성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발전추진체계 간 연계 및 협력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예산의 10%에 불과한 광역경제권 시책추진을 위해 지역별 종합발전체계를 약화시키게 되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기존의 광역경제권 추진방식은 지역경제 현장의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기 어렵다. 지역의 경제 및 산업발전은 제한적인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의 육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발전의 성과는 다양한 산업과 입지조건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 육성 시책이 전략산업이나 선도 사업 육성에만 치중하게 되면, 지역경제 주체의 폭 넓은 관심과 참여를 얻기 어렵다. 광역경제권 시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단위 시책과 사업을 광역경제권 육성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통합 추진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데 치중해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정부의 획일적인 추진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름대로의 공동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충청권을 하나의 통합된 경제권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광역권추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로써 충청광역경제권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전일보 2010-02-23]